




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| | | | 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 |
| | 보도 | 2018. 2.27.(화) 조간 | 배포 | 2018. 2.26.(월) | |
| 책 임 자 |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(2100-1730) | 담 당 자 | 송희경 사무관 (2100-1721) 김지웅 사무관 (2100-1725) 유미리 사무관 (2100-1737) 이영민 사무관 (2100-1722) | | |

제목 : 제29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 (FATF) 총회 결과

◇ 금융정보분석원(원장:정완규)은 대검찰청·국세청·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

◇ 주요 논의 주제

❶ 제31기 FATF 의장국으로 중국(대표 : Liu Xiangmin)을 선출

* 제29기 아르헨티나 → 제30기 미국(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부의장이 됨) → 제31기 중국

❷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구체화

- 대표단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정부 사례를 소개

❸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 보고서(Report to G20, '18.3)를 채택

-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

❹ 회원국(아이슬란드)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

I. FATF* 총회 참석 개요

* '89년 설립. 미·중·일·호주 등 37개 정회원,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, IMF·WB·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(policy-making body) (한국은 '09.10월 정회원 가입)

□ 일시/장소 : 2018.2.18.(일) ~ 2.23.(금), 프랑스 파리

□ 참 석 자 : 금융정보분석원장 (한국 대표), 대검찰청, 국세청, 금감원

II. 회의 결과 주요 내용

1. 차기 부의장국 선출

□ 중국(대표 : Liu Xiangmin)이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

-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('19.7월~'20.6월) FATF 의장국이 되며,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*임

* 제20기 일본('98.7~'99.6), 제23기 홍콩('01.7~'02.6), 제27기 한국('15.7~'16.6)

□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음

- 한·중·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*를 받으므로, 상호 교류·이해 및 협력을 강화하여 FATF의 엄격한 평가 과정에 대응해나갈 필요

* 평가결과 총회 회부 시기(예정) : 중국 '19.2월, 한국 '20.2월, 일본 '20.6월

2.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

□ 지난 17.10월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

- 회원국들은 전자지갑, Mixer*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

* 전자지갑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우며, Mixer는 무작위의 거래 발생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해

- 그럼에도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고,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하여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

-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*을 개정하고,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**(18.3)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

* 15.6월 제정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적용 등을 명시

**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야기한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

-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,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을 소개

※ 가이드라인 번역본 전문을 금융정보분석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 (www.kofiu.go.kr/KOFIU/english/index.jsp)

-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*

*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며, 이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

- 한편,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, 상호 평가(Mutual Evaluation)*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

*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("FATF 국제 기준")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고, 미흡시 제재

3. G20에 제출할 FATF 보고서 채택

- G20 정상회담('17.7월)에서의 요청에 따라 FATF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('18.3월) 보고서*를 채택

*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

- 특히, 한국 대표단의 제안과 회원국의 절대적인 지지에 따라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

4. FATF TREIN* 활동보고 및 향후 업무방향 논의

* 부산 소재 FATF 산하 유일한 연구·교육기관 (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)

- TREIN은 '17년 운영성과 및 '18년 업무계획을 총회에 보고하고, 향후 업무방향을 승인받았음

-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, '17년 교육·연구 성과를 보고

*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, APG(아태지역기구) 공동 워크숍 개최,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개최, FATF 싱크탱크로서 연구 진행 등

- '18년에는 정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JEM*(5.1~4), 판·검사 워크숍**(5.7~8) 등 국제 행사를 TREIN(부산)에서 개최할 예정

* Joint Experts Meeting, 각 국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

**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등을 수사·기소·재판한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

-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하에 작성된 「TREIN 3개년 전략계획*」에 대한 총회 승인을 받아 안정적인 교육·연구 기반 마련

* 연구보다 교육에 집중하고, 총회 승인을 받은 연구 수행 등 운영방향 설정

- 한편,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제로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(2.19)하여 TREIN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*을 심도있게 논의

* 연구원 고용 관련, 내부 운영규정, 소장 업무평가, 외부 펀딩 및 국제협력 등

5. 회원국(아이슬란드)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

- 아이슬란드는 OECD 회원국이자 상당한 경제규모*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을 제외한 대부분 사항에서 FATF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

* 1인당 GDP 약 7만불 수준('16년 기준 세계 7위, 한국 약 2만불 수준)

- 국가 전반의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위험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부실한 점이 전반적인 상호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
- 또한,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수사, 몰수 실적의 부진, 법인·단체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 미흡 등이 크게 문제됨

- 아이슬란드는 국제기준이 강화(12년)된 이후 실시된 상호평가에서 FATF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ICRG* 제재 절차에 회부(Referral)

* International Co-operation Review Group (FATF 실무그룹 중 하나로, 고위험·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)

- ICRG는 향후 1년간 아이슬란드의 후속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, 1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가 ICRG 제재 절차 진행 중임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됨

-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되므로 각 국은 해당국 국민 혹은 기업과 거래 시 강화된 절차*를 취하여야 함

* (예시) 금융거래 개시 등에 있어 자금세탁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(수수료 등 비용 증가)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거래거절 등

→ 국가신인도 하락 및 금융시장 불안, 금융거래시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

□ 평가기준 강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' 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

- FATF 정회원*은 자금세탁 방지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왔으나, 평가가 강화되면서 더욱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가 요구됨을 재확인

* 단일국가로서 회원국은 미국, 영국, 한국 등 35개국에 불과하며, 상호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만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옴

- 또한, 국가 규모*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 시 FATF 기준을 타국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

*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수(약 34만 명) 및 국토 면적(한국과 유사)이 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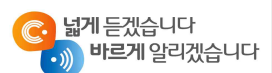
⇒ 범부처 합동의 국가위험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,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는 등 상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

참고 : FATF 개요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□ 설립 목적

- UN 협약*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(Financial Action)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(Task Force)로서 '89년 설립

* 비엔나 협약('88, 마약),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('99), 팔레르모 협약('00, 조직범죄), 메리다 협약('03, 부패) 등

- 마약자금('89)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('96), 테러자금조달('01),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('12)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

□ 주요 기능

-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,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
-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
-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, 대응 수단 개발 등

□ 운영 방식

- 총회(Plenary), 운영위원회(Steering Group), 5개 실무그룹(Working Group)으로 운영되며,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



□ 회원 구성

- 정회원(35국+2기구), 준회원(9개 지역기구), 옵저버(27개 국제기구)로 구성
 -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(FATF Style Regional Body)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*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
- 우리나라는 '98년 아태지역기구*(APG), '09년 FATF 정회원 가입
 - * 41개 회원국 및 36개 옵저버(8개국 + APEC · ADB 등 28개 국제기구)